

‘먹어서 응원하자’? 부흥을 위한 생명정치: ‘예외상태’에서의 동원과 전문성의 정치를 통한 후쿠시마 정상화 시도*

최 종 민**

요약

이 연구는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통해 후쿠시마 부흥 정책 중 하나인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수 전문가들의 판단을 토대로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와 피폭 허용기준치를 정하였고,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 주장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방사능 기준치를 토대로 후쿠시마 부흥 정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가 건강상의 위해를 고려한 것이 아닌 정부의 의도에 따라 바뀐다며 비판했고, 저선량피폭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대항전문가도 존재했다. 시민들은 직접 식품과 환경의 방사능을 측정하였으며,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대항지식 생산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쿠시마의 정상화를 꾀했고, 일본 국민들의 생명은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할 대상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결합하여 규범이 강하게

* 이 논문은 2020년 환경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이후 일본 정부의 생명 정치: ‘먹어서 응원하자’ 사례를 중심으로”를 재구성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유익한 의견을 주신 오은정 박사님과 부족한 원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mycutewani@naver.com

작용하는 ‘예외상태’를 만들었고, 일본 국민들을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하게끔 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외상태’이지만 후쿠시마산 식품과 관련된 생명정치와 후쿠시마 부흥 정책은 후쿠시마를 ‘정상상태’로 정의하며 전개되었다. 예외상태와 정상상태라는 모순적인 기제의 작동을 토대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생명정치는 진행될 수 있었다.

주제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식품 방사능,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 부흥, 생명정치, 전문성의 정치

I. 서론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2년에 설치된 기관인 일본 부흥청(復興庁)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를 먹자(ふくしまを食べよう。)’라는 만화가 실렸다.¹⁾ 후쿠시마의 여고생이 방사능이 걱정되어 후쿠시마산 채소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을 보고 “후쿠시마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느껴 후쿠시마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잡지인 ‘먹거리 통신 편집부’에 들어가 후쿠시마현(県)의 농가를 취재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이다. 여고생들이 취재한 기사는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기뻐하던 여고생들은 후쿠시마를 “소개”할 다음 기사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만화는 끝이 난다(일본 부흥청 2014). 이와 같은 만화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의도를 잘 보여준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도호쿠지방(東北

1) 일본에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2011년 3월 11일부터 동시에 발생했던 재해들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동일본대지진이라 부르지만, 해당 재해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다루는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상황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동일본대진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地方)은 극심한 인적·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수소폭발과 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이하 후쿠시마 원전)이 입지한 후쿠시마 현은 많은 주민들이 피난을 가야 했고, 지역의 여러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후쿠시마현 홈페이지a).²⁾ 특히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은 방사능과 관련된 소위 ‘풍평피해(風評被害)’를 겪으며 판매량과 출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³⁾ 풍평피해는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의 영향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의 생산품 판매가 감소한다는 의미의 일본어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산품에 대한 소문이 ‘근거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만화 ‘후쿠시마를 먹자’의 “오해”와도 겹쳐진다.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정부는 도호쿠지방, 특히 후쿠시마현의 ‘부흥’을 목표로 하며 홍보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이목을 끄는 정책이 ‘먹어서 응원하자!(食べて応援しよう!)’라는 운동이다.⁴⁾ 이름 그대로 재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재해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적극적으로 먹어서 해당 지역의 부흥을 꾀하는 운동이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2016년 큰 지진이 발생한 규슈 지방의 식품에 대해서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이후에는 광범위한 지역의 식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전 사고 지역에만 한정되는 운동은 아니다. 하지만 재해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는 것과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원

2) 2020년 10월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다른 현으로 피난 간 주민들의 수는 29,441명이다(후쿠시마현 홈페이지a).

3) 후쿠시마의 쌀, 소고기, 수산물과 같은 주요 식품의 출하량은 사고 발생 전인 201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8년에는 모두 80%를 밑돌았으며, 특히 넘치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60%가 안 되는 양이 출하되었다(農林水産省 2020).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현황은 이 연구의 3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4) ‘먹어서 응원하자!’를 주관하는 농림수산성에서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농림수산성 홈페이지a).

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일본과 4년간 분쟁한 결과 2019년 WTO의 최종승소 판정을 받은 일 역시 이를 보여준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는 왜 자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중용하는 것일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정말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일까?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미셸 푸코의 ‘생명정치(life politics)’ 개념을 통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살펴볼 것이다. 생명정치는 국가가 인구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과 국민의 건강에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쿠시마산 식품을 대상으로 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생명정치라 볼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생명정치일까?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원전 사고와 방사능의 위험성이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이 일본 정부를 통해 안전하다고 설명되는 구조를 ‘전문성의 정치(politics of expertise)’를 통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주된 자료로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관련된 기관들이 발표한 문헌 등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주장하거나 직접 식품이나 환경의 방사능을 측정할 사례도 검토하여 일본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전문성의 정치를 살펴볼 것이다.

II. 후쿠시마산 식품을 둘러싼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통한 ‘안전’의 생산

1.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와 후쿠시마의 부흥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이 절에서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부흥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관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김인아(2015)는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생활클럽생협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시점에 조합원들은 먹거리를 거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자는 여기에서의 안전이 사고 이후의 생활이라는 이전에는 없던 비일상적인 상황을 일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 보았다. 운영진들과 임원들은 “생”과 “공생”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도호쿠 지방 생산자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조합원들은 가족들의 생을 중시했다. 저자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국가의 부흥 정책에 기반하여 경제 발전과 기업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먹거리 내셔널리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제외한 후쿠시마 부흥을 다루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 부흥 정책에 비판적이다. 전성곤(2013)은 일본의 부흥 정책은 국민들의 국가의식을 고취하지만, 부흥에 주민들이 타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부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타자화와 배제의 문제는 후지타에미와 김주영(2018)도 지적하고 있는데, 피해지역으로서 후쿠시마현(ふくしま) 내에서도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을 가리키는 ‘후쿠시마(フクシマ)’는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같이 가타카나로 표기되며 구분된다. 아울러 후쿠시마의 부흥은 세계를 향한 부흥, 즉 ‘Fukushima’의 부흥이며 일본의 ‘브랜드’ 재구축과 연결되어 있다. 저자들도 부흥이 국가 주도적이면서 주민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부흥 담론의 영향력에 대해 논한 오은정(2020)은 후쿠시마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흥이 주민들로 하여금 방사능 오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을 장려한다고 보았다. 언론과 정부는 오염지역에 남아 살아가는 ‘미덕’을 강화했으며,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심’을 강조했다. 아라이(荒井文雄 2016; 荒井文雄 2017)는 부흥과 귀환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얼굴에 ‘미소(笑顔)’가 돌아온다는 반복적인 프레임과 ‘보통의 생활’을 할 것을 강요하는 담론을 발견했다. 아라이는 오은정과 같이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지역 주민들을 부흥을 위해 동원하고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지내길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저자는 모두 부흥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각각 ‘느린 폭력’, ‘상징 폭력’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점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부흥이 주민들의 ‘삶’의 부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해로 인해 주민들은 삶과 생활을 모두 빼앗겼지만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부흥만을 추구하며, 이러한 구조는 주민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해당 연구들은 일본 정부와 언론의 부흥 담론이 주민들에게 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을 감수하며 사는 삶을 강요하는 폭력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의 희생을 수반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흥 정책과 담론을 보았으며,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흥 정책 또는 담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를 포함

하여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담론을 검토한 연구나 관련 현상을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본 연구도 없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일본 정부의 부흥 정책과 주민 귀환 정책,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 권장 정책은 모두 일본 국민들의 건강, 생명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생명정치를 토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생명정치와 예외상태에서의 ‘벌거벗은 생명’의 탄생

생명정치, 또는 생명관리정치는 푸코의 제안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개념이다. 생물학, 생명과 관련된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물구조의 변형과 조작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논쟁, 국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제도적인 개입이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논의들을 설명하기에 생명정치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푸코(Foucault 2004a; Foucault 2004b)에 따르면 생명관리정치는 18세기 중상주의 시기부터 인구가 일련의 절차들 안에서 관리되어야 할 집합으로 여겨지면서 시작되었다. 중상주의와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국가는 ‘통치화(governmentalisation)’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국가 형태가 되었다. 중상주의 국가의 목표는 화폐의 순환을 통해 부유해지는 것과 인구의 증가를 통해 국가가 강화되며, 외국과 항구적인 경쟁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성의 근본 목표는 경제적 절차나 인구에 내재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적 현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메커니즘, 국가의 개입으로 변해왔다.

푸코는 생명권력을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는데, 생명권력의 규율은 개인의 신체를 자본주의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며 생산력을 향상시켜 생산에 봉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진태원, 2006). 조세, 양육 방식, 도덕이나 종교적인 가치와 같은 특정한 변수들에 의

존하여 변한다는 점에서 인구는 주권자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사법적 주체의 집합이 아닌 상수와 규칙성을 가지며 욕망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인구에 행사되는 권력의 관점에서 푸코가 보는 생명정치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정치권력이다(Jacques 2016). 규율로 인해 인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인구의 세부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뜻하고, 규율을 발전시킬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Foucault 2004a).

하지만 고전주의 시대의 질서를 가진 기계적인 개념으로부터 변화할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거듭난 생명은 학문과 권력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채로 규율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능일수록 높은 지위를 가지는 위계 구조가 생겨나는데,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물의 일반성이 되고, 부차적인 것은 특이성이 된다(강선형, 2014). 인간의 합리성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로 완성된 생물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인 생명이 정치에 반영되면서 생존조건, 개인과 집단의 건강, 체력의 배분 방식이 중시된다.

근대 국가에서 주권자는 종 개념의 신체에 개입하고 조절해서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수명, 장수와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조건들을 고려하게 되었다. 고전주의 시기 주권자에게 있었던 죽게 만들 권리는 근대에 이르러서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으로 바뀐 것이며(양운덕 2008)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권력으로 변한 것이다(진태원 2006).

아감벤은 푸코의 생명관리권력 개념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푸코와는 다른 시각을 통해 관련 논의를 전개했다.⁵⁾ 아감벤(Agamben 1995)은 『호모 사케르』에서 푸코의 국가를 위한 생명, 인구 관리의 개념을

5) 아감벤은 푸코가 생명관리권력 개념을 통해 병원, 감옥과 같은 관리의 공간을 설명하지만 전체주의 국가의 강제수용소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토대로 생명정치 개념을 제시했다.⁶⁾ 푸코와 달리 아감벤은 생명정치 개념을 서구 정치의 근간인 고대 그리스부터 존재했다고 보았다. 그리스어인 조에(zoe)는 모든 생명체와 신에게까지 공통되는 살아있다는 사실이며, 비오스(bios)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유한 삶의 형태인데, 비오스는 폴리스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가치를 가지는 생명이다. 아감벤은 주권자의 권력에 맡겨진 생명을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 했는데, 벌거벗은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며, 자신을 배제하는 형태를 취해야만 질서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아감벤은 조에 역시 추방과 같은 폴리스에 배제된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추방된 자는 살해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생명으로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살인이 가능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근거는 계엄령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과 같은 예외적인 것들이었다.⁷⁾ 예외 상태에서 조에는 주권자의 결정에 맡겨지는 호모 사케르가 된다. 예외 상태는 본래 전쟁과 같은 상황에 국가가 선포하는 계엄 상태를 뜻했지만 전시로부터 해방된 근대 국가에서 국내 질서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치안 유지용 비상조치를 의미하게 되었고, 정치적 계엄상태로 이행했다(박정미 2015).

그렇다면 생명정치 개념을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생명정치 작동의 전제가 되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설명되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문성의 정치 개념을 식품안전, 방사능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기로 한다.

6) 아감벤은 생명정치가 자본주의에 순종하는 신체를 양성시키고,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피하고, 생명을 관리한다고 보았다(신원경 2019).

7) 아감벤에 따르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인이 가능한 생명이 탄생하는 강제수용소의 근거를 마련한 각종 법률들은 계엄령과 같은 예외적인 것들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용소 역시 예외의 공간이다(Agamben 1995).

3. 전문성의 정치: 방시능으로부터의 ‘안전함’의 생산과 이를 둘러싼 논쟁

식품의 안전성에 관해 논할 때 사회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가? 어떠한 집단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그들의 데이터가 사회에 널리 수용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어 왔다(강운재 2012). 이와 같이 위험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데에 전문가들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복잡한 기술사회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김지원·김종영 2013). 특정 지식은 사회적인 지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사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생산된 지식이 수용되게 구조화되어 있다(Jasanoff, 2004). 이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전문가주의(expertism)’라 하며 논의에 누가 참여하고, 누구의 의견에 중요도를 둘 지 경합하는 과정을 ‘전문성의 정치(politics of expertise)’라 한다.

전문가주의는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해당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위험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정태석 2012). 과학기술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인 의사결정이 전문성의 논리로 지배되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충돌한다(이영희 2012; 김지원·김종영 2013).

전문가주의가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전문가의 과학지식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 전문가들이 속한 사회·경제·정치적인 맥락에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전문성의 정치가 전개되면 보통 해당 분야의 주류 전문가집단과 대항전문가집단 또는 시민집단이 대립하지만 대항전문가집단이 시민사회와 연계하기도 한다(한재

각·이영희 2012). 후자의 사례는 먹거리 문제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야 또는 가슴기 살균제 사례와 같이 일반 시민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시민단체에 소속 또는 관계된 전문가가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박진영·구도완 2020) 위험과 관련된 사회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50년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들에게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지식을 제공하여 운동을 지원하거나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운동에 참여해 온 역사가 있다(최종민 2020).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전문가주의적인 입장은 전문가들만이 과학기술적 작업과 논의를 수행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한재각·이영희 2012). 그러나 윈(Wynne 2006)은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는 전문지식의 결핍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주의는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억제하며, 전문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전문가에게만 맡기게 되어 전문가들이 지식을 독점하게 되고, 전문지식에 대한 권위를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전문가에 의해서만은 전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정태석 2012).

식품이나 환경의 방사능에 관한 논쟁에서도 주류 전문가 측과 시민들의 관점은 종종 엇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허용기준치 이하의 저선량피폭에 관해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다고 하거나 저선량피폭의 위해성 자체를 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2014). 하지만 이에 대항하여 반핵의사회와 같은 대항전문가 집단, 시민운동 단체 등에서 방사능에는 역치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경합해 왔다(반핵의사회 홈페이지).⁸⁾ 일본에서도 교토대학교 원자로 실험실과 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학자들이 저선량피폭도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허용기준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실 홈페이지).⁹⁾ 이와 같이 식품에 포함된 방사능의 위험성, 허용기준치, 저선량피폭의 건강상의 위해와 같은 주제를 둘러싸고도 전문성의 정치는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위험 또는 위험 기술과 관련된 논쟁들, 식품의 방사능 위험 문제까지 여러 항목들에서 전문성의 정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대개 소수의 전문가들이 논의의 주류가 되며 정책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왔고,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따라서 방사능과 관련된 정책과 같은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정치는 전문가 중심의 논의 결과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일 것이라 여겨지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산 식품의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 시민들의 방사능과 관련된 지식생산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
- 8) 반핵의사회에서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와 같은 기관이 저선량피폭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핵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함이라 주장했다. 또한 저선량피폭이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최근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며 저선량피폭의 위험성 부정을 반박했다(반핵의사회 홈페이지). 환경운동연합도 방사능 허용 기준치는 핵폭탄, 원전과 같은 핵기술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며, 허용기준치가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핵산업계의 존속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치라 비판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a 2011).
- 9) 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실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 피해자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0.01시버트라는 낮은 수치의 피폭량으로도 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실 홈페이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방사능 기준치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3장에서 다룰 것이다.

Ⅲ.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미친 영향과 시민사회의 대항지식 생산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기준치와 후쿠시마산 식품의 현황

후쿠시마현은 농림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특히 생산량이 일본 전국에서 상위권인 11개의 품목을 가리키는 ‘후쿠시마일레븐(ふくしまイレブン)’을 중심으로 수입을 거둬왔다. ‘후쿠시마일레븐’ 중 2018년을 기준으로 쌀 생산량은 전국 6위, 오이는 4위, 복숭아는 2위인 등 농산품 생산이 특히 발달되어 있다. 또한 2017년 후쿠시마현의 농업 생산액은 2,071억 엔으로 전국 17위였으며, 그중 쌀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였다(후쿠시마현 홈페이지b 2020).

2011년 5월 9일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농산물에 대해 출하제한 지시를 내렸는데, 후쿠시마현의 6개 지역에서 생산된 죽순과 1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사리에 대해 “당분간 출하를 삼가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였다(原子力災害対策本部長 内閣総理大臣 菅 直人 2011). 그리고 경계구역 내의 가축들에 대한 안락사 처분 지시, 농산물 출하제한 지시 품목과 적용 지역 확대를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검사계획, 출하제한 등의 품목·구역의 설정·해제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주로 방사성요오드와 세슘이 검사기준이 되었으며 도호쿠지방과 도쿄, 수도권 도시를 포함한 간토지방(関東地方)의 채소, 우유, 수산물의 일부 품목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잠정규제치”를 넘어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품목들이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섭취량 상위품목”도 고려했음을 밝혔다. 또한 출하제한 지역은 기준치를 넘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토양의 세슘농도, 환경모니터링 결과도 고려하여 정하였다(原子力災害対策本部 2011). 하지만 규제는 점차 완화되어

출하제한도 순차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11월 현재는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도호쿠지방 일부 지역의 채소, 수산물, 곡물, 육류만 출하제한하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a).

또한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수상관저는 ‘후쿠시마현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에서 2011년 7월 후쿠시마산 소고기 중 일부에서 당시 기준치인 1kg당 500베크렐이 넘는 방사성세슘이 검출된 사건에 대해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세슘으로 인한 암 발생의 증가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해대책본부의 ‘후쿠시마현의 일상식(食) 방사선 모니터링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사에 참여한 78명 중 13명의 식사에서 세슘 134가, 26명의 식사에서 세슘 137이 검출되었지만 이를 통한 내부피폭선량 최대치가 자연방사성물질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의 “겨우 70분의 1”이라고 언급하며 안전성을 주장했다(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또한 일본 정부는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에 대해 2012년 4월 1일에 정한 기준치를 채택하고 있는데, 1kg당 일반식품은 100베크렐, 유아용 식품과 우유는 50베크렐, 음료수는 WHO의 기준을 따랐다는 10베크렐이 상한치이다. 일본 정부는 “더욱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수치로 정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식품의 기준치 산출 방법은 일본의 연간 피폭량의 상한치인 1밀리시버트를 기준으로 음료수의 선량(약 0.1밀리시버트/1년)을 뺀 선량을 일반식품에 할당한 후 식량자급률과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에 따라 한도치를 산출하고 이 중 가장 작은 수치를 취한 것이라 한다(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홈페이지). 관저는 새로운 기준치에 대해 미국의 1kg당 1,200 베크렐, EU의 1,250 베크렐이라는 기준치와 비교하며 “국제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엄격한 수준”이라 주장했다(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해당 기준치는 내각부 소속의 ‘식품안전위원회’가 2011년에 발표한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의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토대로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것인데,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중 6명이 의학, 식품가공, 미생물학 등을 전공한 대학 교수였으며 나머지 한 명도 대학교수는 아니지만 경제지 해설위원을 거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食品安全委員會 2011).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2011년 4월 19일 후쿠시마현과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 등에 대해 유아·아동·학생의 방사선 피폭 한도를 연간 20밀리시버트로 높인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는 성인에 비해 방사능 감수성이 민감한 아이들에 대한 조치였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피난 구역 해제 기준을 연간 공간방사선량 1밀리시버트에서 20밀리시버트로 상향하여 주민들의 후쿠시마 귀환 장려를 위한 정책 조치를 취했다(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b).¹⁰⁾ 이는 피폭기준치를 정부의 의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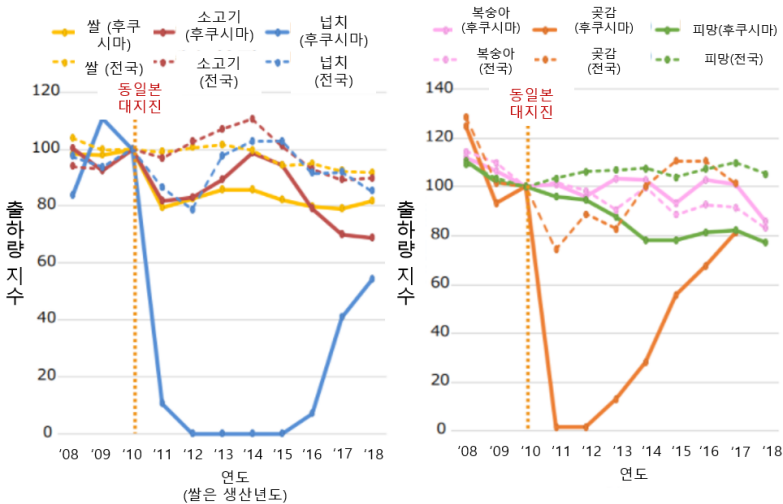
또한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도호쿠지방의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일이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의 야생버섯에서 1kg당 580벵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 2020/12/14). 아울러 한국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9년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치 이상의 세슘 검출빈도는 가공식품은 5.0%,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야생육은 44.3%였다. 이들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 정책으로 인해 원재료의 유통이 증가해 특히 가공식품에서의

10) 한국 환경운동연합도 연간 20mSv는 원전 노동자에게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치이며 독일에서는 원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허용 방사선량 최대치에 해당한다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b).

세습 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시민방사능센터·환경운동연합 2020).

그렇다면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식품의 판매량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그림 1>은 2008년부터 10년간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출하량 추이를 출하량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출하량 지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의 출하량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의 수치이며,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수치는 실선으로, 전국의 수치는 점선으로 나타냈다. 그림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후쿠시마산 쌀, 소고기, 납치, 복숭아, 꽃감, 피망의 출하량 지수가 모두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납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출하되지 않았으며, 꽃감도 2011년부터 1년간 출하지수가 0이었다. 각 품목들은 특정 시기 동안 출하량 회복 움직임이 관찰되었지만 모두 사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출하량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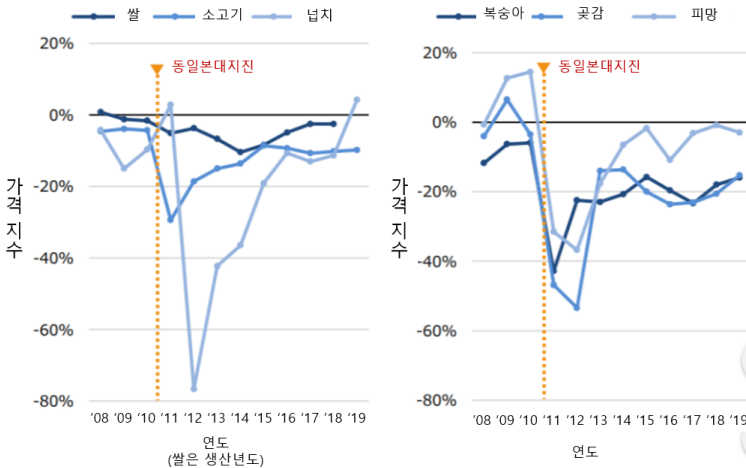
<그림 1>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출하량 추이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의 출하량을 100으로 했을 때의 수치임
 출처: 農林水産省 2020, 2

<그림 2>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평균과 비교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가격 차이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락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넙치의 경우 2012년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 80%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다. 복숭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전국 평균에 비해 40% 가까이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고, 꽃감도 50% 가까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복 추세를 보여 넙치는 2019년에는 후쿠시마산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 비쌌지만, 그 외의 농수산물들은 전국 가격보다 저렴했으며 사고 전에 비해 가격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후쿠시마산 농수산물과 전국 평균 가격차 추이



출처: 農林水産省 2020, 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피폭 한도를 상향시키고,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후쿠시마의 정상화(正常化)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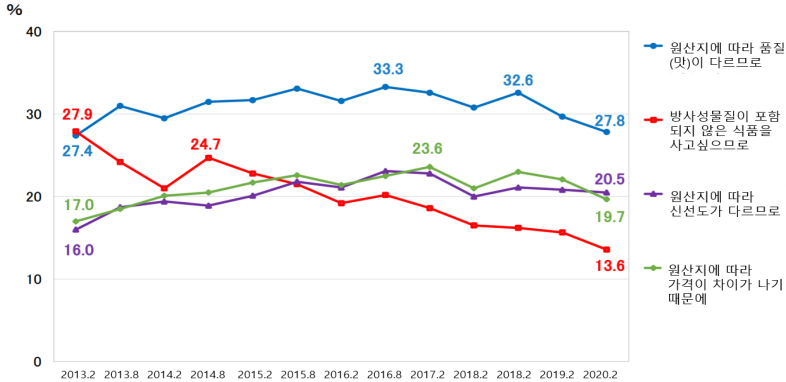
의 움직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한 방사능 기준치의 설정과 이에 대한 국민적인 수용 강요가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후쿠시마산 식품의 가격과 출하량이 사고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시민사회의 방사능 측정과 대항지식 생산의 확대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의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가?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풍평피해’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2020년 3월의 조사 중 식품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가 <그림 3>과 같았다. 그림을 통해 거의 모든 기간 일본의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맛’이었지만 2013년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피하고 싶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사능과 관련된 응답률은 점점 낮아져 2020년 2월에는 항목들 중 가장 낮은 13.6%를 기록했다(消費者庁 2020).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소비자들의 식품에 포함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줄거나 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조사에서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소비자가 46.9%를 차지한 점(消費者庁 2020)을 통해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응답자가 증가했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일본대진재에 대한 망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향(최종민 2020)도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2월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일본 국민들의 피해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고 응답한 것과, 70%가 후쿠시마산 식품 구매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답

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毎日新聞(마이 니치신문) 2021/2/13).¹¹⁾

〈그림 3〉 일본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이유



출처: 消費者庁 2020, 2

하지만 식품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해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민들은 존재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식품과 토양, 공기 중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정보를 얻고자 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탈핵운동 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原子力資料情報室, 통칭 CNIC)’의 시민과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타카기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이하 타카기기금)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값비싼 방사능측정기 구입 지원을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응모가 많았다.¹²⁾ 하지만 기금 규모로는 이들을 모두 지원

11) 참고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부흥 정책에 대해 46%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20%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 타카기 진자부로는 일본의 탈핵운동가이다. 핵공학을 전공했던 그는 원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탈핵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폐쇄적인 핵공학 전문가집단에 대항하는 시민지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타카기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은 그의 사후에 만들어진 기금이다.

해줄 수 없었기에 대신 시민방사능측정 단체들의 연구교류회가 개최되었다. 교류회에 모인 시민단체들은 측정한 방사능수치를 기록하고,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타카기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 홈페이지).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 9월에 ‘모두의 데이터사이트(みんなのデータサイト)’가 만들어 졌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각 지역에서 측정한 방사능 수치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는 산지별로 총 19,000건이 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식품이 후쿠시마산으로 2020년 12월 기준 3,979건의 측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의 데이터사이트에 가입한 시민단체들은 일본 국내 30여개 지역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으며, 식품 이외에도 토양, 수돗물, 의류, 폐기물, 지하수와 같은 환경시료들에 대한 방사능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오염”이 확대된 상황 속에서 “내가 생산하는 것, 또는 소비하는 것의 오염상황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출발하여 “시민의 힘과 지혜를 결집하여 방사능 측정 데이터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두의 데이터사이트는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 지식을 획득하고 생산하려는 전문가지식에 대한 대항지식 생산 사례라 할 수 있다(모두의 데이터사이트 홈페이지).

또한 ‘타라치네(たらちね)’라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市)의 방사능 시민측정실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설립되었는데, 방사능 측정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케어를 목표로 하는 의사들이 주된 구성원인 시민단체이다. 이들은 식품의 방사능을 측정해주는 것에 더해 신체의 방사능 측정을 무료나 1,00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의학자나 탈핵운동 측 인사, 핵기술을 전공하지만 핵기술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항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방사능과 원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공부회나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방사능 측정 보고회를 하는 등 시민들에게 관련 지

식을 전달해왔다(인정NPO법인 이와키방사능시민측정실 타라치네 홈페이지).

이외에도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연합회 역시 사고 이후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대상 품목 선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후쿠시마현과 가까운 이와테현 생협은 이사회에서 탈원전, 핵연료사이클 중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원 확대 요구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했고, 탈원전 집회에 참가하거나 국가에 서명과 요청서를 전달하는 등 관련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이와테 생활협동연합 홈페이지).

시민들의 불안을 의식한 일본 정부 측은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방사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왔고, 시민단체들은 참가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예로 후쿠시마현소비자단체연락협의회는 2012년 정부 기관 주최의 ‘식과 방사능 심포지움(食と放射能シンポジウム)’의 발제자로 참가하여 자신들이 진행한 양케이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인 ‘100(베크렐) 미만이어도 식품에 베크렐 표시를!’, ‘저선량이면 안심해도 된다고 하지만(불안하다)...’와 같은 비판적인 제언과 기준치 이하의 저선량피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田崎由子 2012). 해당 심포지움은 시민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는 했지만 정부 기관의 강의가 행사의 주를 이루었다(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b).¹³⁾ 또한 소비자청이 중심이 되어 2011년부터 개최한 ‘식과 방사능에 관한 설명회(食と放射能に関する説明会)’도 대학교수 등 전문가, 소비자청 직원과 같은 한정된 인사의 강의가 행사의 주된 목적이었다(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

이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과 눈에 보이지 않

13) ‘식과 방사능 심포지움’은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일본 전국에서 개최되었다.

는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정부가 발신하는 정책과 전문지식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의 대항지식 생산의 기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시민사회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생산한 지식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통로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식품의 방사능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전문성의 정치는 전문가주의가 우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IV.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산 식품의 정상화 시도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포함한 동일본대진재라는 전후 초유의 재난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도호쿠지방의 부흥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였다. 2011년에는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을 작성하였고, 2012년 부흥청이 설치되었다. 후쿠시마현은 특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도 달성해야 하는 지역으로 부흥 정책에서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

부흥청은 후쿠시마산 식품의 ‘풍평피해’ 불식을 위한 ‘후쿠시마발 농산물 등 전략적 정보발신 사업’을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약 160억 엔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부흥청은 사업의 목적을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홍보활동을 통해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후쿠시마의 농림수산업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후쿠시마현이 사업 주체가 되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국에 홍보인력 파견, 수도권에서의 프로모션 개최 등 후쿠시마산 농산물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일본 부흥청 홈페이지). 그중 미디어를 활용한 예가 “맛있는 후쿠시마, 완성되었습니다

니다”라는 대사로 시작하는 홍보영상이다.¹⁴⁾ 인기 아이돌그룹 토키오(TOKIO)가 “애정이 담겨있는 후쿠시마의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노출되고, “후쿠시마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하며 홍보영상은 끝난다. 동일본을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홍보영상에서는 토키오가 “오늘도 우리는 잘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일본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어서 응원,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주먹밥, 오이, 토마토, 소고기를 먹는데, ‘푸드 액션 니폰(Food Action Nippon)’ 로고가 영상 처음과 끝에 노출된다.¹⁵⁾ ‘푸드 액션 니폰’은 농림수산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국산식품 소비 운동이다. 후쿠시마 산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정부의 국산식품 소비 운동의 연장으로도 이어져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농림수산성에 서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후쿠시마현의 농림수산업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풍평의 불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가격을 재해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0년은 예산결정액이 약 47억 엔이었다(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b). 농림수산성 대신은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앞서 홈페이지에 ‘국민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성의 호소를 통해 동일본대진재 피해지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제조되고 있는 농림수산물, 가공식품과 같은 피해지 식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대응을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구호 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 해당 영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CRWOGk0uik>

15) 해당 영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시청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NzvZLD5Z5Y>

이 대응은 식품유통·소매업자와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미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피해지응원의 축을 확대하고, 일체감을 빚어 산지의 활력재생을 통한 피해지 부흥을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일본 전국 소비자의 여러 행동을 피해지 응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기업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는 활동을 정부가 후원하기 위해 “부흥액션”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c)

이와 같이 농림수산성은 피해지역의 식품에 대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일본 국민들이 “이미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피해지응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즉, 같은 국민으로서 비참한 재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을 응원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기제를 후쿠시마를 포함한 피해지역의 식품 소비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농림수산성 대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민간단체와 특히 기업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서는 피해지역 식품 판매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1년 4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1,642건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1,295건이 피해지의 식품을 판매하는 행사이며, 243건은 구내식당에서 피해지역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였다(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a).

이와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 중 특히 ‘회사내 마르쉐(社内マルシェ)’와 구내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 제공이 눈에 띈다.¹⁶⁾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구호 하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 단체, 식품생산업자 등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도호쿠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판매시장을 열거나 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16) 마르쉐는 프랑스어로 혈값으로 물건 사기, 쌀값으로 물건 사기라는 뜻이다.

대응을 2011년 4월부터 추진해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경제단체, 식품산업단체, 지자체, 대학 등에 피해지역의 식품 판매촉진 협력을 의뢰했으며, 지자체와 정부기관 식당에서도 해당 지역들의 식재료를 이용하거나 식품을 판매하여 공무원들이 소비하게 했고, 자위대의 식량으로도 공급했다(復興庁 2012).

기업, 재계의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참여에는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經濟団体連合会, 이하 케이단렌)의 영향이 컸다. 1,444개의 일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단렌은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에 협력을 “의뢰”하였고, 이에 응한 각 기업은 케이단렌의 피해지 부흥활동과 연계하여 피해지역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활동 이외에도 사원들에게 피해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원들은 해당 지역의 상품을 구입하여 “부흥지원”을 하도록 기획했다. 마루베니그룹, 손해보협재팬, 도요타자동차, 세븐앤아이홀딩스 등은 구내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나 요리를 판매하고, 사내에 후쿠시마산 식품판매 시장을 여는 등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동참했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아울러 후쿠시마현 역시 “‘힘내라 후쿠시마!’ 응원점포(「がんばろう ふくしま!」応援店)’ 사업을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 홍보와 판매량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사업의 목적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뿌리깊은 풍평(피해)”을 안전이 확인된 식품을 통해 “불식”시키고 판매량과 “소비의욕”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후쿠시마현의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활동을 지원하는데, 2,500개가 넘는 사업자와 점포가 지원을 받고 있다(‘힘내라 후쿠시마!’ 응원점 홈페이지).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 장려는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

림픽에까지 확장되었다.¹⁷⁾ 2018년 6월 20일 후쿠시마현의 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프라이드. 푸드액션추진협의회(ふくしまプライド。フードアクション推進協議会)’가 출범하였다. 협의회의 주된 업무는 도쿄올림픽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호텔, 음식사업자에 판매확대를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올림픽 이후에도 급식사업자와 호텔, 음식사업자에게 후쿠시마현의 농림수산물 유통을 구축하고 판매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후쿠시마현 홈페이지c). 이를 통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일본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범위가 확장되며, 올림픽 이후에도 자국민들의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 확대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의 정상화 시도를 통한 생명정치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방사능과 관련된 기준치 설정과 이를 통한 정책 설계,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시민들의 자주적인 방사능 측정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해당 사례들을 요약하고, 이를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소수 전문가들의 논의와 판단에 기반하여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와 피폭 허용기준치를 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후쿠시마 부흥 정책을 설계하였다. 또한 검출된 방사능이나

17)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추세로 인해 도쿄올림픽은 2020년 3월 24일에 개최 1년 연기가 결정되었다. 연기 결정 이후에도 해당 감염증의 수습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논쟁이 이어졌으며, 2021년 1월 기준 일본 국민들 중 38%가 올림픽 취소, 39%가 개최 시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NHK 2021).

피폭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홍보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정부의 피폭 허용기준치 상향 결정을 비판하거나, 기준치가 건강상의 위해를 고려한 것이 아닌 정부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문제시했다. 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실과 같이 저선량피폭의 위험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려는 대항전문가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WHO의 권고를 따라서 정한 과학적인 수치라고 주장하며 후쿠시마산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수치가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후쿠시마산 식품의 무해성 주장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기준치를 근거로 후쿠시마 부흥 정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직접 식품과 환경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의 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들은 스스로의 운동을 ‘시민과학’이라 부르며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지속적인 대항지식 생산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통해 후쿠시마의 정상화를 꾀했다. ‘후쿠시마는 건강’하다는 홍보나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근거없는 ‘풍평’ 피해라는 주장은 후쿠시마산 식품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식품과 다를 바 없다는 후쿠시마의 정상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후쿠시마 정상화 의도를 토대로 진행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서 일본 국민들 전체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할 대상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가격은 하락추세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산소비운동이라는 본래 존재했던 규범적인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후

쿠시마를 위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전개했다. 이번에는 동일본 대진재가 어느 때보다 비참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재난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내셔널리즘적인 규범에 호소할 수 있었다.¹⁸⁾

공무원과 군인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게 되었다. 이들은 정책의 성공과 사고 전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먹어야 했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기업 직원들 역시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해야만 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동원되는 생명의 범위는 부흥 장치인 도쿄올림픽을 통해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쿄올림픽 참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해야 할 각 국가의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노출된다. 이와 같은 계획은 후쿠시마라는 공간과 후쿠시마의 먹거리가 정상 범주에 있다는 점과, 후쿠시마, 나아가 일본이 부흥에 성공했음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후쿠시마의 부흥은 도쿄올림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후지타에미와 김주영(2018)의 지적과 같이 후쿠시마의 대외적으로 보이는 정상화 여부가 도쿄올림픽 개최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또한 거꾸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의 정상화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는 일본 국민들에게 ‘먹어서 응원하자!’를 강요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생명정치를 작동시키는 예외상태라 할 수 있는가? 동일본대진재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부흥 정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후쿠시마산 식품을 공급하는 협력적인 행위자가 되었다. 촘촘한 그물

18) 김인아(2015)는 ‘먹어서 응원하자!’를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요’한 구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망을 형성하여 국민 식생활에 침투해 있는 대기업이 동원됨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자연생명은 결정권을 갖기 어려워진다. 아무리 슈퍼마켓에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식당에서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와 결합하여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예외상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생명정치의 근거가 되는 입법도 가능하게 했으며, 일본 국민들을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하게끔 하고 있다.¹⁹⁾ 일본 국민들의 생명(zoe)은 대규모의 재난 앞에서 내셔널리즘적인 규범을 통해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한 채 정책에 참여하는 바이오스(bios)화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외상태’를 형성하였지만 후쿠시마산 식품과 관련된 생명정치와 부흥 정책은 후쿠시마를 ‘정상상태’로 정의하는 정상화 시도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정상화 시도는 소수 전문가들의 지식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전문가주의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견지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식품으로 정의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외상태를 형성하였지만 후쿠시마와 후쿠시마산 식품은 정상상태로 정의되었으며, 예외상태와 정상상태라는 모순적인 기제의 작동을 토대로 일본 국민들에 대한 생명정치는 진행되었다.

또한 일본의 생명정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작동한다. 먼저 후쿠시마의 부흥, 나아가 일본의 부흥을 세계에 증명해

19) 피해자와 피해자를 정의하는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 고찰한 키요하라(清原悠 2017)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에서 아감벤의 ‘예외상태’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원전 사고(핵사고)는 그 피해의 크기로 인해 ‘전쟁’과 같은 상태라 보아도 되며, 방사능에 오염된 ‘재해폐기물’을 ‘진재쓰레기’라는 일반폐기물로 취급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11년 8월 제정된 ‘방사성물질오염대책특별조치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아감벤이 주장하는 ‘법률적 형태를 취할 수 없는 것이 법률적 형태가 된 것’이라 평가했다.

야 하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전문가주의를 토대로 논의에 참여하여 정부의 논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동원하고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하는 등 생명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과 식품의 판매량을 사고 전으로 회복시키고, 이를 토대로 부흥도 이루어내야 하는 지자체로서의 후쿠시마도 생명정치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를 생명정치와 전문성의 정치를 이론적인 자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관리의 대상이 되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원전 사고를 통해 재해 지역의 식품을 먹어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고, 일본이 부흥에 성공하여 올림픽까지 개최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은 살거나 죽게 두는 생명이 아닌 소비를 위한 생명으로 정의되었다. 1차적으로는 관료, 재계의 구성원들이 소비를 위한 생명으로 동원되었고, 나머지 국민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 동원의 그물망에 들어오는 ‘벌거벗은 생명’이 되었다.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후쿠시마와 도호쿠 지방의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전문가 위주의 논의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생명정치이자 일본 국민들에 대한 동원의 강요라 할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일본대진재라는 파국적인 재난은 국

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규범이 작동하는 예외상태로서 기능하였으나 역으로 후쿠시마는 전문성의 정치에 의해 정상상태로 정의되었다. 국민들을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동원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쿠시마는 ‘예외상태’를 형성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정치를 통해 ‘정상상태’로 정의되는 모순적인 설정을 토대로 생명정치가 작동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는 푸코나 아감벤이 고려하지 않았던 자연재해와 위험기술의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서의 생명정치 작동이라는 새로운 사례로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위험기술 위에 이루어진 인류의 문명과 현대사회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이 연구는 일본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만이 논의와 정책 결정이 중심이 되는 전문성의 정치는 보여줄 수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의 전문성의 정치 전개와 위험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면밀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부흥과 관련해서는 식품 이외에도 피난구역 해제와 주민 귀환 유도, 원전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칠해진 후쿠시마를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시도가 존재한다. 자연재해와는 피해의 시공간적 범위와 성격이 다른 원전 사고의 관점에서 후쿠시마의 부흥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들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며 연구의 마무리를 대신한다.

투 고 일: 2021년 1월 21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16일

참고문헌

- 강선형. 2014.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8: 129-148.
- 강운재. 2012. “식품위험정책과 전문성의 정치.” 『환경사회학연구 ECO』 16(2): 253-288.
- 김인아. 2015. “생(生)과 공생(共生)의 식탁: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한 생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화적 구성과 실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지원·김종영. 2013. “4대강 개발과 전문성의 정치.” 『환경사회학연구 ECO』 17(1): 163-232.
- 박정미. 2015.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한국사회학』 49(2): 1-33.
- 박진영·구도완. 2020.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전문가 대응 활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24(1): 135-179.
-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2020.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20/03/2019-%EC%9D%BC%EB%B3%B8-%EB%86%8D%EC%88%98%EC%B6%95%EC%82%B0%EB%AC%BC-%EB%B0%A9%EC%82%AC%EB%8A%A5-%EB%B3%B4%EA%B3%A0%EC%84%9C.pdf>(검색일: 2021. 2. 20).
- 신원경. 2019. “울리 체의 소설 『범죄의 증거: 소송』에 나타난 생명권력 분석 - 아감벤의 생명정치 관점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83: 147-165.
- 양운덕. 2008. “미시권력들의 작용과 생명 정치: 푸코의 권력분석틀과 아감벤의 근대 생명정치학 비판.” 『철학연구』 36: 169-214.

- 오은정. 2020. “재후(災後)의 시공간에 울려 퍼지는 ‘부흥’이라는 주문(呪文):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흥의 사회 드라마와 느린 폭력.” 『한국문화인류학』 53(3): 339-383.
- 이영희. 2012. “전문성의 정치와 사회운동.” 『경제와사회』 93: 13-41.
- 일본 부흥청. 2014. “きっかけは、すぐそばに。(계기는, 바로 가까이에).” <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20/2019/manga/index.html>(검색일: 2020. 11. 23).
- 전성곤. 2013. “3.11 이후의 일본사회 변동과 ‘마이너리티’ - 부흥을 위한 국가와 개인의 문제 -.” 『일본학』 36: 65-92.
- 정태석. 2012. “방폐장 입지선정에서 전문성의 정치와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의 균열.” 『경제와사회』 93: 72-103.
- 진태원. 2006. “생명정치의 탄생 - 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사회』 19(3): 216-237.
- 최종민. 2020. “일본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담론투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 안전신화'를 중심으로(1954-1980)-.”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한재각. 이영희. 2012.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전문성의 정치.” 『과학기술학연구』 12(1): 107-144.
-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2014. ‘2014년 9월 29일, JTBC뉴스에서 보도한 ‘설마했는데 역시나...일본 폐기물서 ‘세습’ 발견’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후지타에미. 김주영. 2018. “모빌리티 위기로서의 원전 재해지역을 통해 본 부흥과 재해의식- <ふくしま>와 ‘フクシマ’와 “Fukushima”의 부흥-.” 『일본어문학』 79: 395-421.
- 原子力災害対策本部. 2011. “検査計画、出荷制限等の品目・区域の設定・解除の考え方.”
- 原子力災害対策本部長 内閣総理大臣 菅 直人. 2011. “指示.”

農林水産省. 2020. “令和元年度福島県産農産物等流通実態調査の結果 (ポイント).”

毎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21/2/13. “東日本大震災 国民の関心薄れ「感じる」84%(동일본대진재 - 국민의 관심이 줄고 있다고 ‘느낀다’ 84%).”

消費者庁. 2020. “風評被害に関する消費者意識の実態調査(第13回)について.”

食品安全委員会. 2011. “食品中に含まれる放射性物質.”

荒井文雄. 2016. “福島第一原発事故関連報道と象徴暴力 (上).” 『人文科学系列』 49: 465-491.

_____. 2017. “福島第一原発事故関連報道と象徴暴力 (下).” 『人文科学系列』 50: 385-407.

NHK. 2021/1/13. “東京五輪・パラ「開催すべき」16% 先月より11ポイント減(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해야 한다’ 16%, 지난 달보다 11% 감소).”

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 2020/12/14. “南三陸の野生キノコから基準値超すセシウム、震災後で初…出荷自粛要請(미나마산리쿠의 야생버섯에서 기준치 초과 세슘, 진재 후 처음 ... 출하 자숙 요청).”

清原悠. 2017. “「原発事故被災地・被災者」を誰が決めるのか?: 「放射能汚染の矮小化」に対抗する、市民放射能測定所の「土壌汚染調査」に着目して.” 『サステイナビリティ研究』 7: 59-76.

田崎由子. 2012. “食と放射能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福島県消費者団体連絡協議会.

復興庁. 2012. “原子力災害による風評被害を含む影響への対策パッケージの概要.”

Agamben, Giorgio. 1995. *Homo Sacer: Il potere sovrano e la nuda vita*, Torino: Einaudi.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Foucault, Michel. 2004a.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Paris: Gallimard. (심세광·전혜리·조성은 역. 2011. 『안전, 영토, 인구』. 서울: 난장.)

Foucault, Michel. 2004b. *La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8-1979)*. Paris: Gallimard. (심세광·전혜리·조성은 역.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Jacques, Bidet. 2016. *Marx Et La Loi Travail Le Corps Biopolitique Du "Capital"* Paris: Sociales. (자크 비데. 배세진 역. 2020. 『마르크스의 생명정치학: 푸코와 함께 마르크스를』. 파주: 오월의봄)

Jasanoff, Shelia, ed. 2004.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social order*. London: Routledge.

Wynne, Brian. 2006. “Public Engagement as a Means of Restoring Public Trust in Science - Hitting the Notes, but Missing the Music?.” *Community Genetics* 9(3):211-20.

<인터넷 홈페이지>

교토대학교 원자로실험실(京都大学 原子炉実験室) 홈페이지.

<http://www.rri.kyoto-u.ac.jp/NSRG/kid/radiation/rel-risk.htm>(검색일: 2020. 12. 30).

모두의 데이터사이트(みんなのデータサイト) 홈페이지.

<https://data.minnansods.net/labs/>(접속일: 2020. 12. 07.).

반핵의사회 홈페이지. 2019/12/18. <http://nonukes.or.kr/?p=3259>(검색일: 2021. 02. 13).

이와테 생활협동연합회(いわて生活協同連合) 홈페이지.

<https://www.iwate.coop/information/support.html>(검색일: 2020.12.30).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홈페이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13/067_09.pdf(검색일: 2020. 11. 28).

일본 농림수산업성(農林水産省) 홈페이지a.

<https://www.maff.go.jp/j/shokusan/eat/attach/pdf/index-10.pdf>(검색일: 2020. 11. 27).

b.

<https://www.maff.go.jp/j/budget/r2kettei.html>(검색일: 2020. 11. 27).

c.

<https://www.maff.go.jp/j/shokusan/eat/tabete/message.html>(검색일: 2020. 11. 27).

일본 부흥청(復興庁) 홈페이지.

<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2542.html>(검색일: 2020. 11. 29).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 홈페이지.

<https://jccu.coop/products/safety/radiation/>(검색일: 2020.12.30).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홈페이지.

https://www.caa.go.jp/disaster/earthquake/understanding_food_and_radiation/r_commu/(검색일: 2021. 02. 14).

일본 수상관저(首相官邸)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saigai/senmonka_g31.html#u2(검색일: 2021. 01. 02).

일본 정부홍보 온라인(政府広報オンライン) 홈페이지.

<https://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204/3.html>(검색일: 2020. 11. 28).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a.

<https://www.mhlw.go.jp/content/11135000/000693383.pdf>(검색일: 2020. 11. 28).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b.

<https://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iken/120420-1.html>(검색일: 2021. 02. 14).

인정NPO법인 이와키방사능시민측정실 타라치네(認定NPO法人 いわき放射能市民測定室 たらちね) 홈페이지.

<https://tarachineiwaki.org/>(검색일: 2020.12.30).

타카기진자부로 시민과학기금(高木仁三郎市民科学基金) 홈페이지.

<http://www.takagifund.org/activity/sokutei/index.html>(검색일: 2020. 12. 07).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a. <http://kfem.or.kr/?p=6391>(검색일: 2020. 12. 30).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b. <http://kfem.or.kr/?p=31751>(검색일: 2020. 11. 28).

후쿠시마현 홈페이지a.

<http://www.pref.fukushima.lg.jp/uploaded/attachment/411639.pdf>
(검색일: 2020 11. 22).

_____ b. 2020.03.09.

<https://www.pref.fukushima.lg.jp/site/kodomotoukei/deta-02.html>
(검색일: 2020. 11. 28).

_____ c.

<https://www.pref.fukushima.lg.jp/sec/36035a/food-action.html>(검색일: 2020. 11. 22).

‘힘내라 후쿠시마!’ 응원점(「頑張ろうふくしま!」応援店) 홈페이지.

<https://www.ganbarou-fukushima.jp/>(검색일: 2021. 02. 18).

Abstract

“Support by Eating?” Life Politics for Reconstruction:
Mobilization in ‘State of Exception’ and Attempt at Normalization
of Fukushima through Politics of Expertise

Jong-min CHOI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Support by Eating” campaign, one of reconstruction of Fukushima policies developed from the life politics and politics of expertise.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new permissible levels of radioactivity in food and exposure based on the judgements of a few experts after the accident. And the government developed this logic further by claiming that if the radioactivity level is lower than the permissible level, then it must be safe. Based on this guideline developed from the claim that food from Fukushima is safe and permissible level outlined by the experts,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policies and campaigns for the reconstruction of Fukushima. But Japanese citizens criticized the government created these standards not out of the concern that it could pose as hazards to the citizens and can be modified to reflect the government's agendas or intentions. Furthermore, some counter experts suggested the danger of low-level exposure. Japanese citizens began to measure and monitor the food and

environment and created an independent archive as an example of lay knowledge production. Regardless of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continued the Tabete Ouene, or “Support by Eating” campaign for the normalization of Fukushima, which resulted in making the lives of Japanese people a subject for the Fukushima food consumption.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combined with the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 created a state of exception which a norm was strictly implemented and led Japanese people to consume Fukushima food as “exposed and bare lives”. Also, the accident was defined as the “state of exception,” but Fukushima was defined as the “normal state,” thus normalizing the area due to the life politics for the Fukushima food and the reconstruction of Fukushima policies. Therefore, based on this paradoxical mechanism of coexistence of “state of exception” and “normal state,” the life politics of the Japanese citizens continued.

Keywords: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Foods Radioactivity, Support by Eating, Reconstruction of Fukushima, Life Politics, Politics of Expertise

